



정년 연장법 통과 쟁점과 과제

2013.05.09 | 김수현_새사연 연구원 | sida7@saesayon.org

정년 연장법의 통과로 60세 정년이 의무화되었다. 재계 등의 우려와 달리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정년 연장이 청년층의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낳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정년 연장을 통해 심각한 중고령층의 현실을 개선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전체 고용 증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년 연장법 통과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는 정년연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4월 30일 국회 법사위는 본회의를 열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2016년부터, 국가 및 지자체,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권고사항이었던 정년 60세가 의무화된다. 개정안은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현행법을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60세 정년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을 추가해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노력도 담고 있다. 하지만 정년이 연장되어도 연령을 이유로 한 직간접적인 해고가 용인된다면 정년 연장은 무의미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조항은 60세 미만의 노동자를 연령을 이유로 해고하는 사용자나 기업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민형사상 처벌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정년 연장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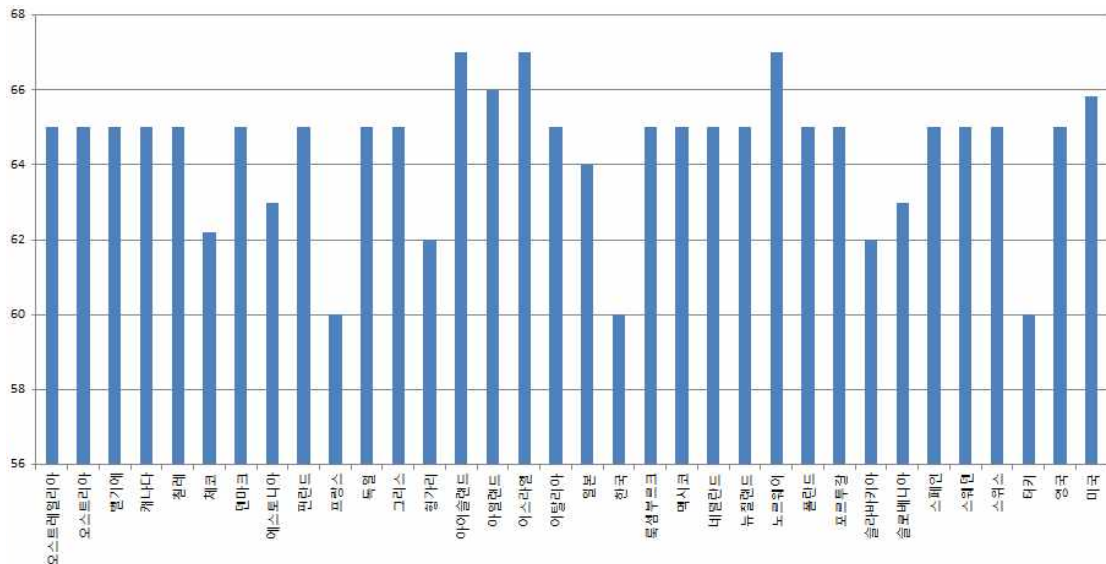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이와 같은 정년 연장법은 지난 대선 여야 모두의 공통된 공약으로 이번 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고용불안 및 빈곤의 위험에 직면한 중고령층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의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가장 현실성 있는 정책 방안으로 꼽혀왔다. 60세 미만의 노동자들은 현재 직장에서 퇴직해도 국민연금의 지원도 받지 못하며, 퇴직 이후 대부분이 재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일자리가 부족하고 일자리를 구한다고 해도 고용불안, 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이 특징인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고령 노동자의 현실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정년 연장은 필요하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새로운 생산가능인구 증가의 둔화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인구 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여성 노동자의 경제활동참가를 증진시키는 정책과 함께 중고령 노동자의 경제활동참가를 유지하고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정년 연장은 향후 그 중요성이 더해질 것이다.

[그림 1] OECD 주요 국가들의 남성 은퇴 연령(2011년)



※ 우리나라의 경우 권고사항인 60세가 공식 퇴직연령으로 보고되었음

※ 출처 : OECD 홈페이지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정년이 없거나 우리나라보다 정년이 긴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은 연령을 이유로 한 강제 퇴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영국은 65세 이상 정년제를 허용하다 2011년 10월부터 정년제를 폐지했다. 독일은 65세인 정년을 67세로 늦추려 하고 있으며, 60세 정년제도가 시행되던 일본은 2013년 올해 4월부터 정년을 65세로 늦추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년의 폐지 또는 연장은 차별 금지법에 의해 시행되거나 연금 부족 및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같은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년 연장법, 청년층 일자리를 감소시킬까?

정년 연장법이 발표되자 재계와 정부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정년 연장에 따른 고용비용 부담 증가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청년고용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할 것이란 문제제기가 이어졌는데, 재계는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는 중고령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그로 인해 청년들을 고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며 청년 고용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를 표했다. 여기에 더해 일부 정부부처와 언론 역시 정년 연장법이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에 따르면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보다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사용자에게 설문한 연구에서 정년이 연장될 경우 신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통계가 나오고 있고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¹⁾ 또한 세대 간 일자리 경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김대일(2004)²⁾, 김준영(2011)³⁾, 권혜자(2010)⁴⁾, 안주엽(2011)⁵⁾, 현대경제연구원(2010)⁶⁾ 등 대부분의 연구는 중고령층과 청년층 사이 일자리 경합이나 고용대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분석하고 있다. 오히려 보완관계에 있다는 결과를 내놓은 연구들도 있다.

이는 청년들의 일자리와 중고령층의 일자리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와 중고령층이 실제 고용되어 있는 일자리가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중고령층의 정년 연장이 청년층 고용을 대체하거나 세대 간 일자리 경합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실제 통계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다. [부표 1], [부표 2], [부표 3]은 통계청의 201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통해 20대 청년층과 50대와 60대 중고령층의 산업별 직종별 종사자 비율을 추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청년층과 중고령층 사이 일자리 분포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차이는 임금 수준을 고려하면 더욱 확연히 드러나는데, 이는 정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중고령층과 청년

1) 이찬영, 태원유, 김정근, 손민중 (2011)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3S’ 현상 진단: 노동력 부족, 생산성 저하, 세대 간 일자리 경합」, 삼성경제연구소
2) 김대일 (2004) 「고령화와 노동시장 변화」,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 I』, 한국노동연구원
3) 김준영 (2011) 「고령층 고용변동이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 사업체패널 자료를 이용한 분석」, 노동경제론집
4) 권혜자 (2010) 『연령세대별 일자리 변화와 고용서비스 정책 과제』, 한국고용정보원
5) 안주엽 (2011) 『세대 간 고용대체 가능성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6) 현대경제연구원 (2010)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현안분석과 정책적 지원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층 사이 일자리 경합이 그리 크지 않으리라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재계의 주장대로 중고령자 노동자의 정년 연장으로 인해 기업들이 신규 고용을 줄인다면 청년층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는 남는다. 이런 재계의 주장은 임금기금설 혹은 임금총량설에 근거한 주장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기업이 고용된 노동자에게 지불할 임금 총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금을 많이 받는 중고령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거나 노동조합의 주장대로 임금이 상승할 경우 신규 고용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이론이다. 임금총량설이 현실에 부합한다면 정년 연장은 청년층 신규 고용에 부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

그러나 밀(J.S. Mill)이나 뵘바베르크(Böhm-Bawerk) 등에 의해 주장되기도 했던 이 이론에 대해 Kapteyn, et al.(2004)⁷⁾, Jousten, et al.(2010)⁸⁾ 등은 노동수요는 임금 수준, 생산성, 경기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변화하기 때문에 노동수요가 고정되어 있다는 주장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현실에서 기업이 고용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있다손 치더라도 금융불안정과 같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경기가 불황이라면 고용을 하지 않을 것이며, 경기가 활성화되는 상황이라면 신규 투자를 해서라도 고용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기술이 변하거나 산업구조가 변하면 그에 맞춰 고용이 변화하는 것이지 주어진 고정된 임금 총량에 의해 고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과연 우리 현실에서 이런 임금총량설에 의해 기업이 운영되는가는 생각해볼 문제이다. 과연 기업들은 고용할 여력이 남아도 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할까?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총량설에서 주장하는 정년 연장보다는 앞서 이야기한 경기, 경제적 불확실성 등의 요인들이 청년 고용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정년 연장으로 고령화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함과 동시에 고용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변화,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고용을 촉진시키는 제도 등을 통해 청년들의 고용 또한 증가시키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임금 총액이 총액인건비제한에 의해 규제되는 공공부문의 경우 이러한 임금총량설에 의해 청년고용이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총액인건비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정부의 정책이 함께 추진되고 청년층에 대한 고용을 증대시키는 정책이 추진된다면 전체 고용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7) Kapteyn, A., Kalwij, A. and Zaidi, A. (2004) 'The myth of worksharing', *Labour Economics*, 11(3): 293-313.

8) Jousten, A., Lefebvre, M., Perelman, S. and Pesieau, P. (2010) 'The effects of early retirement on youth unemployment: the case of Belgium', in Gruber, J. and Wise, D.A. (eds) *Social Security Programs and Retirement around the World: the Relationship to Youth Employment*,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정년 연장법, 남은 과제는?

정년 연장법의 시행은 고령화 시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원을 유지 증가시키는 방안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중고령층 빈곤문제와 중고령층 노동자의 노동시장 내 차별과 배제와 같은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고령층을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청장년층에 그 부담을 전가시키기보다 일할 여건이 되며 일을 하려고 하는 중고령 노동자의 사회적 참여를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년 연장법이 통과되었다고 해도 아직 여러 가지 과제들이 남아 있다. 우선 정책 시행과 관련해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지 못한다면 사실상 앞서 이야기한 긍정적인 효과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물론 개정안에 명시된 60세 미만 노동자들에 대해 연령을 이유로 한 해고를 금지하는 안이 지금보다 나은 상황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법안을 위반했을 때 받는 처벌이 불명확해 사용자의 법 위반을 강력하게 규제할 수 없다는 점은 향후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부당노동행위로 사용주와 기업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현대차와 같은 대기업을 이를 통해 규제할 수 있을 까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임금개편 역시 향후 문제로 작용할 수가 있다. 개정안은 임금개편과 관련해 향후 노사간 논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임금개편이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중고령 노동자의 임금을 더 낮게 할 수도 있다는 데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2년 8월 현재 50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21만 8천원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210만 4천원보다 높다. 하지만 50대 임금근로자의 39.2%가 일하고 있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200만원에 훨씬 못 미친다.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개편이 이런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년 연장법 시행과 함께 중소기업이 정년 연장에 동참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방안 역시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60세 이상의 중고령자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2011년 연간 자료를 이용해 추계한 결과를 보면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구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⁹⁾. 이는 자산 축적이 60세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60세 이상 중고령층의 경우 생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을 수 있음을 가리킨다. 60대 중고령층의 경우에는 고용률이 50% 이

9) 여기서 빈곤율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음. 통계청과 같은 방식으로 가구원 수를 고려한 균등화 가처분소득을 구하고 중위 균등화 가처분소득의 50% 이하를 빈곤선으로 해 빈곤인구를 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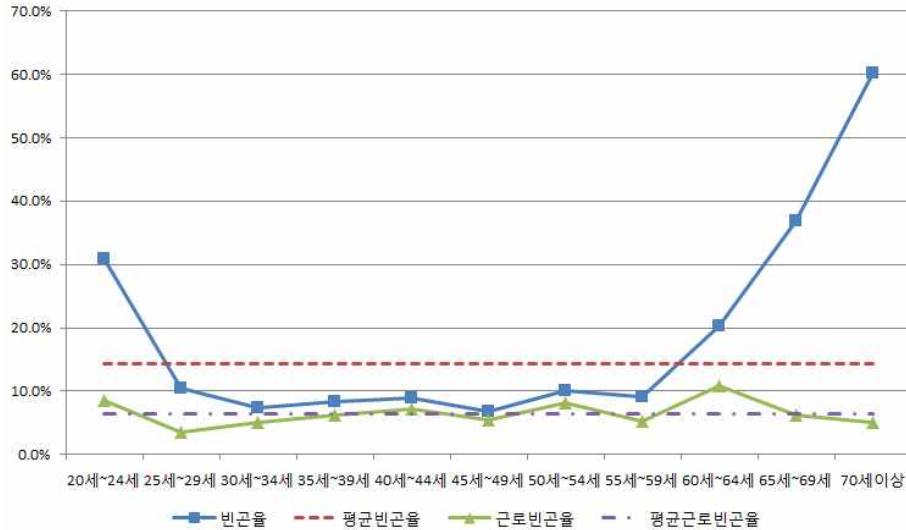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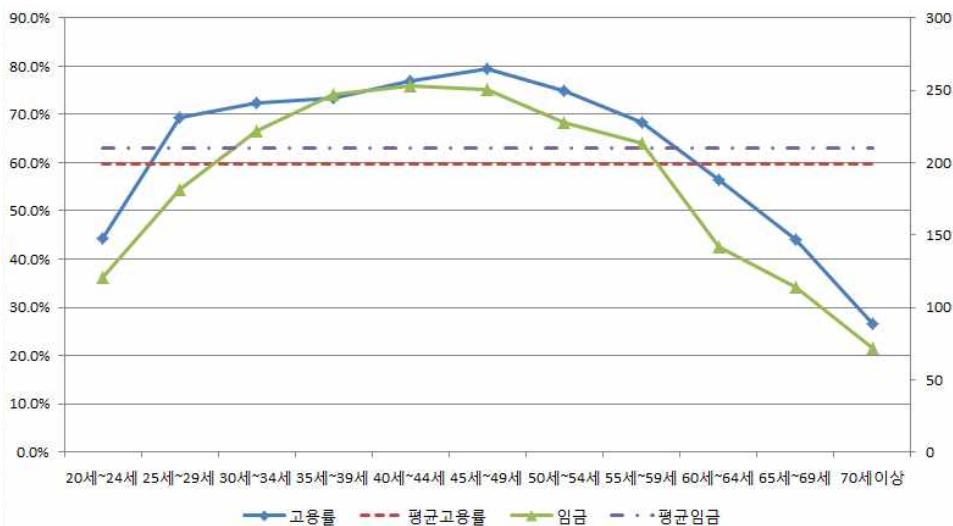
상으로 임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고용, 낮은 임금으로 인해 빈곤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도 많다. 이들을 위한 정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중고령층 일자리 지원센터를 강화 확대해 정년 이후 중고령층에 적합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한편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2] 가구주 연령대별 빈곤율, 근로빈곤율 (단위 : %)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1년 연간 자료 이용 추계

[그림 3] 연령대별 고용률, 월평균 임금 (단위 : %, 만원)



※ 고용률은 좌측 축, 임금은 우측 축 참조

※ 출처 : 통계청 201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이용 추계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아울러 정부는 정년 연장법을 포함해 전체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도 구상해야 한다. 정년 연장법은 중고령층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고용 증대에도 기여하는 정책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정년 연장법을 통해 중고령층의 고용 증대를 추진함과 동시에 고용에 있어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청년층, 여성들을 노동시장으로 이끌 수 있는 정책, 그리고 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해 양질의 일자리 중심의 고용 증대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부표 1] 20대 임금근로자의 산업별 직종별 종사 비율

직종 산업	1	2	3	4	5	6	7	8	9	전체
1	0.0%	0.0%	0.1%	0.0%	0.0%	0.1%	0.0%	0.0%	0.1%	0.3%
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3	0.0%	2.8%	4.7%	0.0%	0.2%	0.0%	2.0%	6.2%	1.8%	17.7%
4	0.0%	0.1%	0.1%	0.0%	0.0%	0.0%	0.0%	0.0%	0.0%	0.2%
5	0.0%	0.0%	0.1%	0.0%	0.0%	0.0%	0.0%	0.1%	0.0%	0.2%
6	0.0%	0.7%	1.5%	0.0%	0.0%	0.0%	0.8%	0.2%	0.5%	3.7%
7	0.0%	1.0%	3.8%	0.0%	8.9%	0.0%	0.2%	0.3%	1.2%	15.5%
8	0.0%	0.1%	1.5%	0.3%	0.0%	0.0%	0.0%	0.1%	0.5%	2.5%
9	0.0%	0.2%	0.4%	5.8%	0.9%	0.0%	0.2%	0.0%	1.3%	8.9%
10	0.0%	3.0%	1.2%	0.1%	0.4%	0.0%	0.3%	0.1%	0.1%	5.1%
11	0.1%	0.4%	3.3%	0.0%	0.3%	0.0%	0.0%	0.0%	0.1%	4.2%
12	0.0%	0.2%	0.3%	0.0%	0.1%	0.0%	0.1%	0.1%	0.1%	0.8%
13	0.0%	3.6%	3.2%	0.1%	0.1%	0.0%	0.1%	0.1%	0.0%	7.2%
14	0.0%	0.4%	1.8%	1.2%	0.3%	0.0%	0.3%	0.4%	0.6%	5.0%
15	0.0%	0.3%	1.2%	0.6%	0.0%	0.0%	0.0%	0.0%	0.1%	2.2%
16	0.0%	7.6%	2.0%	0.0%	0.0%	0.0%	0.0%	0.0%	0.0%	9.6%
17	0.0%	8.8%	1.3%	0.5%	0.0%	0.0%	0.0%	0.0%	0.1%	10.7%
18	0.0%	0.7%	0.7%	1.0%	0.2%	0.0%	0.0%	0.0%	0.1%	2.7%
19	0.0%	0.3%	0.5%	1.8%	0.0%	0.0%	0.8%	0.1%	0.0%	3.6%
2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전체	0.2%	29.9%	27.6%	11.4%	11.5%	0.2%	4.9%	7.7%	6.6%	100%

※ 통계청 201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 추계

※ 산업과 직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¹⁰⁾와 한국표준직업분류¹¹⁾의 대분류를 사용함

10)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5.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업, 9. 숙박 및 음식점업,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 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6. 교육 서비스업, 1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0.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21. 국제 및 외국기관

11)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부표 2] 50대 임금근로자의 산업별 직종별 종사 비율

직종 산업	1	2	3	4	5	6	7	8	9	전체
1	0.0%	0.1%	0.1%	0.0%	0.0%	0.3%	0.0%	0.0%	0.5%	1.1%
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1%
3	0.8%	0.8%	1.9%	0.1%	0.1%	0.0%	4.4%	8.1%	3.5%	19.5%
4	0.0%	0.1%	0.2%	0.0%	0.0%	0.0%	0.0%	0.1%	0.0%	0.5%
5	0.0%	0.0%	0.1%	0.0%	0.0%	0.0%	0.0%	0.3%	0.2%	0.6%
6	0.8%	0.5%	0.6%	0.0%	0.1%	0.1%	5.9%	0.3%	2.7%	11.0%
7	0.3%	0.4%	0.9%	0.1%	3.5%	0.0%	0.3%	0.3%	1.7%	7.5%
8	0.3%	0.2%	0.6%	0.1%	0.1%	0.0%	0.3%	4.3%	0.9%	6.8%
9	0.1%	0.0%	0.1%	5.0%	0.1%	0.0%	0.0%	0.0%	3.1%	8.4%
10	0.3%	0.6%	0.3%	0.0%	0.0%	0.0%	0.1%	0.1%	0.1%	1.6%
11	0.4%	0.1%	1.0%	0.1%	1.7%	0.0%	0.0%	0.0%	0.1%	3.5%
12	0.1%	0.3%	0.5%	0.0%	0.1%	0.0%	0.1%	0.2%	0.6%	1.9%
13	0.2%	1.2%	0.7%	0.0%	0.0%	0.0%	0.0%	0.1%	0.1%	2.3%
14	0.1%	0.1%	0.5%	0.6%	0.3%	0.1%	0.3%	0.9%	5.4%	8.3%
15	0.1%	1.0%	3.0%	1.3%	0.0%	0.0%	0.0%	0.2%	1.5%	7.1%
16	0.5%	3.6%	0.4%	0.8%	0.0%	0.1%	0.2%	0.1%	0.5%	6.2%
17	0.1%	1.3%	0.5%	3.1%	0.0%	0.0%	0.1%	0.2%	0.6%	6.0%
18	0.0%	0.1%	0.1%	0.1%	0.0%	0.0%	0.0%	0.0%	0.2%	0.6%
19	0.0%	1.6%	0.5%	0.9%	0.2%	0.0%	0.6%	0.4%	0.5%	4.7%
20	0.0%	0.0%	0.0%	0.1%	0.0%	0.0%	0.0%	0.0%	2.0%	2.2%
2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1%
전체	4.3%	11.9%	12.0%	12.2%	6.1%	0.7%	12.7%	15.9%	24.2%	100%

※ 통계청 201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 추계

※ 산업과 직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¹²⁾와 한국표준직업분류¹³⁾의 대분류를 사용함

12)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5.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업, 9. 숙박 및 음식점업,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 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6. 교육 서비스업, 1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0.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21. 국제 및 외국기관

13)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부표 3] 60대 임금근로자의 산업별 직종별 종사 비율

직종 산업	1	2	3	4	5	6	7	8	9	전체
1	0.0%	0.1%	0.0%	0.1%	0.0%	0.3%	0.0%	0.0%	2.2%	2.8%
2	0.0%	0.0%	0.0%	0.0%	0.0%	0.0%	0.0%	0.0%	0.1%	0.1%
3	0.7%	0.4%	0.7%	0.2%	0.0%	0.0%	2.6%	3.5%	3.9%	12.1%
4	0.0%	0.0%	0.0%	0.0%	0.0%	0.0%	0.0%	0.0%	0.0%	0.1%
5	0.0%	0.1%	0.0%	0.0%	0.0%	0.1%	0.0%	0.0%	0.3%	0.4%
6	0.5%	0.6%	0.2%	0.0%	0.0%	0.1%	5.0%	0.2%	3.6%	10.2%
7	0.3%	0.3%	0.1%	0.2%	2.5%	0.0%	0.3%	0.2%	3.7%	7.5%
8	0.1%	0.4%	0.1%	0.1%	0.1%	0.0%	0.1%	3.2%	0.8%	4.8%
9	0.0%	0.0%	0.0%	2.0%	0.1%	0.0%	0.0%	0.0%	2.9%	5.0%
10	0.1%	0.0%	0.0%	0.0%	0.0%	0.0%	0.0%	0.0%	0.1%	0.3%
11	0.1%	0.0%	0.2%	0.0%	1.0%	0.0%	0.0%	0.0%	0.2%	1.6%
12	0.1%	0.2%	0.3%	0.0%	0.1%	0.0%	0.0%	0.2%	4.2%	5.2%
13	0.3%	1.1%	0.3%	0.0%	0.0%	0.0%	0.0%	0.0%	0.1%	1.8%
14	0.4%	0.1%	0.2%	0.5%	0.0%	0.0%	0.5%	0.5%	18.7%	21.0%
15	0.1%	0.3%	0.7%	0.5%	0.0%	0.1%	0.0%	0.0%	4.2%	5.8%
16	0.7%	0.9%	0.1%	0.0%	0.0%	0.1%	0.0%	0.2%	1.2%	3.2%
17	0.0%	0.6%	0.2%	2.6%	0.0%	0.0%	0.2%	0.2%	2.5%	6.2%
18	0.0%	0.0%	0.0%	0.0%	0.0%	0.1%	0.0%	0.0%	0.4%	0.7%
19	0.0%	1.5%	0.7%	0.8%	0.3%	0.0%	0.2%	0.1%	1.8%	5.4%
20	0.0%	0.0%	0.0%	0.1%	0.0%	0.0%	0.0%	0.0%	5.6%	5.7%
21	0.0%	0.0%	0.0%	0.0%	0.0%	0.0%	0.0%	0.0%	0.1%	0.2%
전체	3.6%	6.5%	3.9%	7.1%	4.2%	0.8%	9.0%	8.4%	56.5%	100%

※ 통계청 201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 추계

※ 산업과 직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¹⁴⁾와 한국표준직업분류¹⁵⁾의 대분류를 사용함

14)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5.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업, 9. 숙박 및 음식점업,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 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6. 교육 서비스업, 1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0.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21. 국제 및 외국기관

15)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2013년 새사연의 ‘이슈진단’ 목록

2013년 5월 9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이슈진단	2/7	사교육비를 더 늘리거나 아예 포기하거나	김병권
이슈진단	2/15	20대 청년층 취업자 감소 양상 산업별, 직업별 분석	김수현
이슈진단	2/22	‘나 홀로 아동’ 대책은 없나	최정은
이슈진단	3/9	스위스 국민투표, “경영자 보수를 제한하라”	김병권
이슈진단	3/11	차베스 사후, 베네수엘라 경제는 지속 가능할까?	여경훈
이슈진단	3/11	경제가 부진해도 주가가 오르는 이유	김병권
이슈진단	3/13	여성 노동의 현실에 대한 진단과 과제	김수현
이슈진단	3/18	주주총회 시즌에 생각해 보는 경제 민주화	김병권
이슈진단	3/23	유럽의 숨겨진 분단국가 키프로스의 비극	김병권
이슈진단	4/2	성평등지수로 본 젠더불평등	최정은
이슈진단	4/3	부동산으로는 경기를 살릴 수 없다	김병권
이슈진단	4/11	한국 경제와 이스라엘 경제의 유사점과 차이점	김병권
이슈진단	4/24	박근혜 정부의 보육정책 평가	최정은
이슈진단	5/2	전 세계를 속인 엑셀 불황	여경훈
이슈진단	5/9	정년 연장법 통과 쟁점과 과제	김수현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